

#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본격 가동

### 도의회, 구성안 대표발의 이명연 의원 등 7명 선임

전북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연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특위 위원들은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을, 부위원장에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을 선출하고 특위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도정 연관성과 지역내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전라북도로의 유치를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명연 특위위원장은 제7, 8, 9, 10대 전주시의회 의원 및 제9대 전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어 특위 위원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연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점을 검토하는 움직임 등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전북 여건에 맞는 전략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전북혁신

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연구·개발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대형 국책 금융기관 등을 유치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특위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해 오는 22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활동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이 11일 '전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약칭 '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 전북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조례 발의

### 도의회 정호윤 의원 조례는 상임위 통과



다. 정호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지 9년이 경과했고 관련 국내법이 제정된 지도 5년이 됐는데 자치법규만 부재한 입법 미비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다양성 조례는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22일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진성 기자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다.

## 전두환,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법정 출석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1996년 형사법정에 선지는 23년 만이다.

전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한 부인인 이순자(79) 씨와 피고인 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하다 몇 차례 고개를 젓히고 졸고 있는 모습을 방청객에 드러냈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지 위반을 재차 주장하며 재판장의 판단을 바꿨다.

동시에 '1980년 5월 헬기사격이 존재했으며, 전 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오후 법정중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10개월 만에 피고인 전씨가 참석한 사실상의 첫 재판이다.

전씨는 재판 시작 1분 전 부인 이 씨와 함께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방청객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전 씨는 두 눈을 감고 재판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어 재판장은 전 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리 준비한 '헤드셋'(청각보조장치)을 전 씨에게 건넸다.

법원 직원 등의 도움으로 헤드셋을 착용한 전 씨는 재판장이 다시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연립과 주소를 확인하자 그제서야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사의 모두진술에 앞서 전 씨는 착용한 헤드셋을 벗었다.

법정에 검사는 모두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씨 사건을 수사한 전·현 광주지검 소속 검사들이다.

### 부인 이순자와 동석 사자명예훼손 혐의 부인 증거정리 위해 내달 8일 공판준비기일 갖기로

검사들은 미리 준비한 화면 자료를 이용해 전 씨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부인 이 씨와 자리를 바꿔 앉기도 했다. 피고인석 모니터 화면이 이 씨 앞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씨는 화면 속 자신의 공소사실과 검사를 번갈아 보며 눈을 감기도 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에 이어 피고인 모두진술 절차에 이르자 전 씨의 변호인은 일어서 발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먼저 재판 관할지 위반 설명에 집중했다. 광주에서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되풀이 한 것이다.

오랜시간 변호인의 진술이 이어지자 전 씨는 눈을 감고 꾸벅꾸벅 왼쪽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 사이 전씨의 변호인은 몇가지 근거를 들며 전 씨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결론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장은 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4월8일 오후 2시 관련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부인 이씨는 검사와 대화를 나누다 편지봉투 하나를 재판장에 전달했다.

재판장은 이 편지가 "재판부에 당

부하는 사항, 재판에 임하는 느낌 등을 적은 글로 이해하겠다"며 오후 3시45분께 재판을 마쳤다.

전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사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과립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신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뉴시스

## "선거제 개혁, 개혁의 방아쇠"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대 국회서 꼭 처리" 강조 "공수처법·국정원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처리 시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선거제 개혁을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로 규정하며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20년 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명령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시급히 처리할 과제로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5·18 폄훼 발언, 최순실 태블릿 조작 가짜뉴스 '선동' 등을 열거하면서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냐"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나왔다.

홍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5·18 폄훼 발언, 가짜뉴스 등이 언급되자 한국당 의석에서 "내로남불", "누가할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는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를 가능성을 높였다"는 인식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실리적 유대감이 형성돼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아울러 "균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라며 양측의 협조도 촉구했다.

단 북한이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 복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와 관련하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거듭 강조했다. 단 소득주도성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 조금 더 기다리고 보완하겠다"면서도 "포용적 성장에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제조업 르네상스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 연결권 허용 ▲규제 혁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법 입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되 정부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마키스 노동개혁도 제안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혁(격차 해소) ▲임금체계 단순화 ▲공공부문 임금 공시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청년세대와 관련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년들과 함께 뛰겠다"며 ▲청년정책 총괄기구 신설 ▲청년기본법 통과 등을 제안했다. /뉴시스

## 최경환·민병두 "5·18 망언 엄중히 처벌해야"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민원씨를 고소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그는 "광주에서, 사법부에서 전두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5·18 유공자인 두 의원은 앞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김순례·이종평 의원과 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과 관련한 소회를 묻자 최 의원은 "전두환은 5·18 망언의 뿌리"라며 "당시에 전두환이 '폭동'이라고 한 게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씨의 망언은)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라며 "특히 국회의원

으로서 사법적으로 확립된 내용에 대해 국회 안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의원 3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열버무리며 (해당 의원 징계와 관련해)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무시한 행위를 자당 의원이라고 감싸면 자유한국당은 민주정당으로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5·18 망언은 민주화운동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역사와 진실의 탐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분열주의가 발 불이게 해선 안 된다. 엄중한 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나선 광주 시민에 대해 모독이고 구체적으로 북한군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규정당한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 익산 북부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연속지원 이끌어

### 평화당 조배숙 의원

익산 북부시장이 중소기업부가 추진하는 '2019년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익산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은 11일,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에 익산 북부시장이 지난해 7월 특성과 첫걸음 시장 선정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되어,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고유 특색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가 지원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익산 북부시장은 2년간 최대 10억원(국비50%, 지방비50%)을 지원받게 되며,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문화 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디자인 재생 등 다양한 프로젝트



가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그동안 국회 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의 시급함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이번 문화관광형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는 미륵사지-왕궁리 등 익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의 연계 강조, 사업 선정의 당위성에 대해 중소기업부 등 관계 기관을 끊임없이 설득해 왔다.

조배숙 의원은 "익산의 북부시장이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익산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분청 귀빈식당에서 문화사 국회외교장관 오찬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의정계 말

슴드렸다"고 전했다.

여야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개혁·입법 법안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다루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